

제22대 총선 주요 공약 정책리포트

□ 제22대 총선 국민의힘·더불어민주당 분야별 주요 공약

분야	국민의힘	더불어민주당
금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중견기업의 첨단기술, 전략사업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사모사채 (P-CBO) 발행 지원 - 유동화 증권의 발행 금리 인하 방안 마련 ○대기업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(CVC) 활성화, CVC 외부투자 및 해외투자 규제 완화 - 일반지주회사가 '벤처투자촉진법'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대·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모델 구축 - 중견기업이 CVC설립을 통해 전략신산업에 진출하거나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의 규모에 따라 분리규제 - 일반지주회사 보유 CVC가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외부자금 유치 한도를 확대하고, 해외투자 금액 비중도 상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 (clawback) 도입 - 금융회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되면 일정 기간(예: 3년)에 해당하는 경영진 보수를 환수 ○대주주 등 내부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자본시장 참여제한, 금융거래 제한, 상장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방식 도입 ○상장법인 임직원·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환수 강화 - 6개월 이내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이 매매차익을 반환청구하도록 의무화
조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금융투자소득세 폐지,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 유지 ○자본시장을 통한 자산 형성 기회 확대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(ISA)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○핵심 탄소저감기술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로 지정, 세제지원 확대 - 철강, 석유화학, 반도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기술개발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콘텐츠 산업 세제지원 확대 - 콘텐츠 R&D 세제지원 확대 -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상시제도화 추진 - 음악 등 각종 공연제작, e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○에너지 세제 도입 등 탄소세제 개편 추진, 재생에너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 추가 - CBAM 등 탄소무역장벽에 대비한 탄소세 도입 공론화 및 단계적 추진 - 기업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및 투자 유도

<p>공정거래</p>	<p>○가맹점이 본부에 결제하는 납품대금 카드결제 의무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납품대금 결제방식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'가맹사업법' 개정 - 표준가맹계약서상 현금결제 강요 방지조항을 전 가맹업종 가맹사업표준계약서로 확대 <p>○환불(소비자)·결제/사용(가맹점)과 같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체계 개선 등을 담은 표준약관 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상품권의 환불액을 구매액 대비 최소 수수료율로 상향 - 결제/사용 수수료의 경우, 사용처 가맹점과 수수료 부담비율 협의 의무 검토 - 모바일상품권 선물하기 수신자도 교환·환불 요청 할 수 있도록 약관 마련 	<p>○가맹점주·대리점주·수탁사업자·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의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열위적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협상권 부여 - 하도급거래·수위탁거래 시 조합의 교섭권 보장 확대 <p>○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 조성 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을 통한 중소·벤처기업 기술보호 강화 - 중소기업 기술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선도기업 육성
<p>노동</p>	<p>○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현장 안전보건체계 마련 지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50인 미만 기업 전체 대상 '산업안전 대진단' 실시 - 컨설팅·교육·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 - 기업별 안전관리체계 마련 및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활용 지원 - 중소기업이 안전보건체계를 마련하는 기간 동안 관련 규제 유예 <p>○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시행기간 연장 및 요건 완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' 개정 	<p>○'정규직' 고용 및 채용 원칙 명시 /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전환 지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시·지속업무, 생명·안전업무 등에 대한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원칙 제도화 - 고용이력(해고과다, 비정규직고용과다 등)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'고용보험 경험요율제' 도입 - 비정규직·특수고용 등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지원금 대폭 확대 <p>○포괄임금제금지 등 근로기준법에 명문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시간노동과 '공짜 노동'을 근절하기 위해 포괄임금제 금지 제도화 - 사용자가 실근로시간을 측정·기록하도록 의무화 - 기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 마련 - 근로시간 외 SNS 등에 의한 업무지시 금지 등 종합적 개선 방안 마련
<p>환경</p>	<p>○플라스틱 제품 경량화, 재생원료 사용으로 플라스틱 사용 감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PET병, 일회용 배달용기 경량화 의무화 등으로 플라스틱 사용 감축 - 2027년까지 음식점, 카페 등 총 3만개소 	<p>○탈(脫)플라스틱 추진 컨트롤타워 설치 및 재생플라스틱 사용 확대 제도 개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親플라스틱 사회를 →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의 제조·생산 →

	<p>대상으로 다회용기 보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 <p>○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 상향 및 유상할당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4기 계획기간(2026년~2030년) 산업별 감축목표를 국가감축목표 상 부문별 목표보다 상향 - 부분·업종별 차등적으로 유상할당을 상향하고 수입금은 기업의 저탄소전환 비용에 재투자 	<p>유통·소비 → 분리·배출 → 수거·선별 → 재활용(재사용)과 같은 물질 흐름에 대해서 단계별로 대책 마련</p> <p>○탄소중립산업법(한국형 IRA) 제정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탄소중립산업(전기차, 재생에너지, 그린수소 등)에 대한 지원 강화 -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 조성으로 탄소중립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 지원 -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 촉진을 통해 제조업의 공동화 방지
<p>건설</p>	<p>○GTX 기존 노선 신속 개통 / 신규노선 발굴 및 확정 추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A노선 : 2028년 완전 개통 추진 - B·C노선 : 2024년 상반기 착공 - D·E·F노선 : 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- 대구경북신공항철도 GTX 급행철도차량 투입 <p>○도심복합개발을 통해 노후화된 구도심을 미래형 압축도시로 정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역세권 콤팩트시티, 준공업지역, 도로·철도 지하화 상부공간 등 다양한 지역에 적용 	<p>○1기 신도시 신속한 재개발·재건축 / 교통이 편리한 2기 신도시 및 자족기능을 갖춘 3기 신도시 건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용적률 500%까지 상향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- 현금청산자 권리 강화 추진 <p>○철도, GTX, 도시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/ 상부는 주변지역과 통합개발하여 지역 내 랜드마크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노선별 마스터플랜 수립 - 상부·주변지역 통합개발 ⇒ 자족기능 갖춘 '주거복합플랫폼' 조성
<p>중소기업</p>	<p>○수출중소기업도 이용가능한 수출팩토링 서비스 개편 및 신규 도입 추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출입은행의 팩토링 지원시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의무화 추진 - 무역보험공사, 중진공,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수출팩토링 도입 검토 <p>○비수도권, 뿌리산업, 인력수요 등을 감안해 외국인 고용한도 탄력성 강화</p>	<p>○제3자 기관이 주도하는 '중소기업 맞춤형 구조조정 제도' 도입 추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어려운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제도 보완 -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표준화된 절차 제공 등으로 기업과 사업의 회생 도모 <p>○중소기업의 공동교섭권 보장 및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지원 제도 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 원청과 대등하게 교섭하여 제값 받고 대·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-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한 「공정거래법」 적용 요건 완화

<p>국방</p>	<p>○군 부대의 효율적.전문적인 급식 시스템의 단계적 도입</p>	<p>○청렴서약서 대상 확대 및 구체화(미 등기임원 포함) - 방위사업법 개정</p> <p>○방산 비리 업체 입찰 참여제한 기 간 확대</p>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